

[종합·해설]

문화수도 종합 토론회

“문화전당, 시민·관광객 유인 시설 부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기능이 주로 교육과 연구에 치중, 문화 소비자인 광주시민과 관광객 등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전당+도심 활성화’ 전략 필요
재미와 문화체험 가능한 공간 돼야



20일 오후 광주시 광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위직기자 jrw@kwangju.co.kr

또한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를 7대 문화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문화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과 도심지역을 하나로 묶어 발전시키는 도심재생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연속 토론회(4차, 종합토론회)’에서 김종현 전남대 교수는 “예비종합계획상 전당의 기능이 문화의 창조·연구·교육·교류 등 전통적인 분야에 집중되는 바람에 실제 문화전당을 이용할 시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종합계획에 전당 수익 구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당 운영이 방문객의 관람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바람에 경제적 하위 계층의 문화소비를 억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전당을 국내, 아시아, 전세계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명소로써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전당에 아시아의 문화를 집합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통 관심 사항(섬유나 음식, 자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들을 발굴, 아시아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기업·도시들이 자발적으로 기획된 주제에 따라 대규모 전시나 관련 행사, 영화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용준 조선대 교수는 문화수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전당+7대 문화지구’ 발전 전략 개념 대신 ‘문화전당+도심 개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50만명에 불과한 광주시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도시 전체를 개발하기 보다는 문화전당과 도심 지역을 상호·발전시키는 것이 한층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당 주변 공간을 발전시켜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전당 외곽에 주차장을 신설해 시민들이 걸어서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문화전당-예술의 거리-중랑로-금남로-폐선부지 등의 가로로 연결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영화 한편을 제작하는 데 2천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문광부가 광주 문화산업에 배정할 예산은 1천억에 못 미칠 정도로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광주시의 전략산업과 전라도의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아시아 각국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집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市·道 연말연시 큰 폭 인사

시, 정무라인 강화·3급 승진 4명
도, 파견 간부 10명 복귀 진통 예상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말연시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0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정무부시장과 비서실장을 내년 1월까지 외부에서 영입하겠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이상 인사 26일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을 추스르는 임무를 부여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이상 인사 시행계획’도 발표, “승진 예정 인원이 3급(4~3급) 4명 등 30명”이라고 밝혔다. 4급(5~4급)은 9명, 5급(6~5급)은 17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48년생 3급 간부’ 3명을 명예퇴직하도록 하거나 대기발령한다는데 계획이다. 여기에 공석인 비엔날레 사무국장 자리까지 합하면 3급 승진 자리는 4석이 된다. 시는 또 복지여성과장·여성정책과장도 공모해, 연초 조직개편이 되면 임부가 유산 시장을 또 “비서실장도 외부에서 영입해 시민단체·언론·전문가 그룹의

연초로 예정된 전남도 간부 인사에

연초로 예정된 전남도 간부 인사에



웃고는 있지만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정철호 방인을 논의했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결렬됐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전채희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김 원내대표, 강봉국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공정위 ‘제이유’ 능력처리 의혹”

김정훈 의원 “사건발생 2년뒤 징계”

피해자모임 ‘국가상대 499억 손해배상 청구’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 유착 여부를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위가 제이유 관련 사건의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날 “공정위가 제이유의 잇단 위법행위에 대해 대부분 2년 이상 지난 뒤 징계를 내리는 등 능력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이유가 지난 2003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에야 제이유위원회의

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지난 2004년에도 제이유가 법정기준을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더니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역시 2년여가 지난 올 3월로 이뤄졌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위법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사를 빨리 진행해 올 6월 시정조치를 의결했으나 이는 올 3월 30일 제이유가 서울시에 다단계 판매업 폐업신고를 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제이유 유착 의혹이 제기된 공정위에 대한 수사 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 형태로 접수된 수사 의뢰서를 전달받았다”며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제이유 사건을 ‘공정위의 정책적 뒷받침과 유착으로 성장하고 직무유기와 행정 태만으로 피해가 극대화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정위와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제이유 사업자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 19일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한 제이유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 등 공유마켓팅 피해자 3개 모임은 이날 “공정위가 다단계업체의 관리를 잘못해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9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이유 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등 ‘공유마켓팅’ 피해자 3개 모임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고건·손학규·정운찬·한화갑 경선해야”
한나라당 고진화의원
대선경선 출마 선언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0일 “중도개혁 정당을 만들어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운찬 전 서 울대 총장,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간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빅텐트를 만들고, 이들 네 사람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 굉장한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중도개혁노선의 해저모여서

신당창당을 주도해 대선후보를 만들 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은 호남의 팽주로 자리잡았지만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시대정신에 따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최대한 규합해 빅텐트를 차야 한다”고 고 전 총리와 정 전 총장을 예로 든 뒤 “정 전 총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민주당이 빅텐트를 만들고, 이들 네 사람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 굉장한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중도개혁노선의 해저모여서

한 나라 당 내 개혁성향 의원 중 한명인 고진화 의원이 20일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의 한 측근은 20일 “내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007 대한민국 패러다임 슈프리트’ 세미나에서 고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선 출마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며 “경선 출마선언은 내년 2월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제권판결' (Legal Decision) for the year 2006. It lists various cases with details such as the parties involved, case number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ad is presented in a structured table format.

Large advertisement for South Bay College of Tom. The header reads 'CANADA, SOUTH BAY COLLEGE OF TOM' and '한국의대 입학생 모집!' (Recruit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ad promotes the college as a place where students can become bilingual and gain admission to universities in Canada and the US. It includes a list of benefits for studen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llege.